Busan Blockchain
Regulation Free Special Zone
Conference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컨퍼런스

Blockchain beyond the future

중소벤처기업부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KIAT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BUSAN TECHNO PARK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컨퍼런스

Blockchain beyond the future

2022.11.21.(MON) 15:00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시실리룸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컨퍼런스

Blockchain beyond the future

Program

Time	Title	Presenter
14:30~15:00 / 30분	참가자 등록 및 접수	
15:00~15:05 / 5분	인사말	
15:05~15:10 / 5분	축사	
15:10~15:20 / 10분	2022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성과 발표	
15:20~15:50 / 30분	1부 전문가 초청 발표 **<블록체인, 규제 동향과 법률>**	권오훈 변호사 (차앤권 법률사무소)
15:50~16:00 / 10분	Coffee Break	
16:00~16:10 / 10분	**특구 사업자 발표 1** (부산은행) - 디지털 원장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서비스	
16:10~16:20 / 10분	**특구 사업자 발표 2** (세종텔레콤) -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 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	
16:20~16:30 / 10분	**특구 사업자 발표 3** (에이아이플랫폼) - 블록체인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	
16:30~16:35 / 5분	Coffee Break	
16:35~17:05 / 30분	2부 전문가 초청 발표 **<블록체인 산업의 글로벌 트랜드>**	박재현 대표 (람다256)
17:05~17:35 / 30분	패널 토의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Busan Blockchain
Regulation Free Special Zone
Conference

01

블록체인, 규제 동향과 법률

차앤권 법률사무소 권오훈 변호사

블록체인, 규제 동향과 법률

차앤권 법률사무소 권오훈 변호사
Cha & Kwon Law Offices

연사 소개

권오훈 변호사

- 차앤권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겸임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 전문위원
- KISA 핀테크, 블록체인 전문위원
-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 ohkwon@chakwon.com
- 02-6245-9092

CHA & KWON
차·권 법률사무소

규제 및 법률 동향___한국

- 이달 초,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11인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습니다.

-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디지털자산은 기존「특정금융정보법」제2조제3호를 준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하고, 덧붙여 디지털자산사업자, 디지털자산시장 등을 정의
  - 이용자 예치금의 신탁과 디지털자산의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 준비금 적립 의무화 등 이용자 자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자기발행 디지털자산 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디지털자산사업자에게 자율적인 상시 감시・신고의무를 부과하여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함
  - 금융위원회에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검사・조사권한, 시정명령・영업정지・수사기관 고발 등 처분권한 등을 규정함
  -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시장 및 사업자를 감독・조사하거나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하는 경우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함
  -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행위자와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CHA & KWON
차·권 법률사무소

규제 및 법률 동향___한국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개선필요 사항

-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산업 종사자의 예측가능성 및 현실적인 운영 현황을 고려해야 하는 바, 업무 실무에 비해 과한 법적 부담은 현실성을 갖추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 규제 대상인 디지털 자산에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를 포함하는 것은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급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 (FATF 권고안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수집품으로서의 NFT는 가상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음)

- 제8조 불공정행위 등의 금지의 경우 위법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 제2항의 경우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당한 행위가 위법 행위로 분류될 위험이 있음
  - 제3항의 경우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 등의 구체적인 행위 양태가 정해지지 않아 명확성이 떨어짐

-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를 보다 시급한 과제인 특금법 상의 실명확인계좌 발급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보다 조속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 가상자산 발행과 관련한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발행 관련한 규정 또한 조속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 특히 부칙 제3조의 경우 스테이블 코인에 증권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세가지 토큰 유형은 구분하여야 함.

CHA & KWON
차·권 법률사무소

규제 및 법률 동향___미국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화폐 및 암호화폐는 증권과 다름 없다고 기본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기존 증권과 같은 법률의 영향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지난 10월, 게리 갠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 “암호화폐를 금지한 중국 선례는 따르지 않을 것”
  -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증권의 정의에 포괄돼야 하고, 거래소들은 SEC에 등록하고 그에 맞는 규제를 받아야”
  - “탈중앙화된 플랫폼으로 불리는 디파이 플랫폼 안에도 중앙적인 플랫폼이 작동하기 때문에 탈중앙화 거래소들(DEXs)도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또한 암호화폐 감독을 준비 중
  - 지난 9월 로스틴 벤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디지털 자산은 미국의 주류 금융 포트폴리오에 통합될 수 있으며 우리는 이와 관련된 규제를 시작할 준비가 됐다."

CHA & KWON
차·권 법률사무소

규제 및 법률 동향___미국

- 지난 9월, 바이든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 체계 방향성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1.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2. 금융안정성 강화
3. 불법 자금 조달 및 금융활동 퇴치
4. 미국의 글로벌 금융 리더십 및 경쟁력 강화
5. 금융 포용성(Financial inclusion)
6. 책임있는 혁신(Responsible innovation)

CHA & KWON
차·권 법률사무소

규제 및 법률 동향___미국

중간 선거가 가상화폐 시장에 미칠 영향 예상

- 미국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가 개별의원들의 암호화폐 선호도와 공개 발언을 분석한 결과,
  - 공화당은 82%, 민주당은 50%가 가상자산에 대해 친화적으로 나타났습니다.
- 가상화폐 채굴 과정에 필요한 막대한 에너지 사용량을 두고 정치권, 특히 민주당 측에서 비판적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 바이든 정부의 기조에 따라 친환경 정책을 강조해 오던 미국 민주당에서 가상화폐 채굴업자들의 에너지 사용량을 두고 규제 강화 등을 추진하는 목소리가 커져왔습니다.
  - 반면 야당인 공화당 측은 가상화폐 및 채굴업체를 전반적으로 지지하는 태도를 보여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 민주당 우위 시: 규제 강화 추진에 따른 가상화폐 투자자 이탈과 시장 침체가 장기간 시세 약세를 이끌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공화당 우위 시: 가상화폐 채굴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운영을 지속할 수 있고 이는 가상화폐시장 전반의 거래 활성화와 투자자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HA & KWON
차·권 법률사무소

규제 및 법률 동향___미국

가상화폐거래소 FTX의 유동성 위기에 따른 향후 동향

- 미국 상원, FTX 붕괴를 직면한 후 가상자산(암호화폐) 감독을 강화하는 디지털상품소비자보호법(DCCPA) 도입 추진
  - 위의 법이 시행될 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가상자산 감독 권한이 강화됩니다.
- 이와 관련해 AP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법무부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FTX 사태를 조사해 범죄 행위 여부를 가려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 현재 미 상원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감독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부여하는 동시에 다른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 감독권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부여하는 초당적 제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 정부의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가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 되어 FTX 사태의 향방과 그에 따른 미국 관계기관의 추이를 눈 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CHA & KWON
차·권 법률사무소

규제 및 법률 동향___싱가포르

- 정부는 암호화폐의 사회, 경제적 잠재력은 인지하고 있어, 싱가포르 금융계 적용에 유익한 규제 환경을 실용적으로 구축하고자 하지만, 동반되는 위험 요소에 대한 분석과 조사를 하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 현재 싱가포르에서 암호화폐는 각 특성에 따라 증권 등의 자본 시장 상품과 같은 규제 상품, 전자화폐 또는 디지털 결제 토큰(DPT)으로 취급 되고 있습니다.
- 싱가포르 금융관리국(MAS)는 아직까지 그 어떠한 상용 암호화폐도 지원하거나 발행하지 않았지만, 블록체인 및 분산 원장 기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 싱가포르 정부는 최근 개인 투자자 및 자금 세탁을 포함한 추가 위험 사항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 지침을 발표하고 '지불 서비스법' 개정안(PSA)을 통과시켰으며 '금융 서비스 및 시장 법안'(FSM)을 통과시켰습니다.
- 암호화폐는 각 특성에 따라 '지불 서비스법'(PSA) 개정안의 규제를 받거나, 또는 증권 등의 자본 시장 상품과 같은 규제 상품의 특성을 지닐 경우, '증권 및 선물법'(FSM)의 규제를 받기도 합니다.
- 싱가포르 고등 법원은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이 소유권 보전 명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그에 따른 향후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지난 26일, 싱가포르 중앙 은행은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된 두 개의 제안안을 공개했습니다.
  - 제안안에 포함된 조치에 따르면, 기업은 개인 고객이 소유한 암호화폐를 대출할 수 없게 되고, 고객 자산과 기업 자산이 분리 됩니다. 더 나아가, 암호화폐 거래 사업자는 개인 고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금지되고 암호화폐 구매를 위한 신용 카드 사용이 불가해지며, 개인 고객에게 융자를 제공하는 것 또한 제한 됩니다.

CHA & KWON
차·권 법률사무소

규제 및 법률 동향___홍콩

- 홍콩은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한 중국 본토와 크게 다르지 않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 올해 1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암호화폐를 제외하고 800만 홍콩달러(미화 1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전문 투자자만이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했었습니다.
- 하지만, 지난 달 말, 홍콩 정부는 이전의 기조를 바꾸고, 개인 투자자가 암호화폐 및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또한, 정부는 토큰화된 자산에 대한 재산권을 검토하고 사전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자체 실행되는 거래, 소위 스마트 계약의 합법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일부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움직임이 부동산 증권 토큰 공개(STO)을 위한 길을 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 2023년 3월부터 시행 될 것으로 예정된 '가상자산사업자(VASP) 인허가 제도'를 통해 거래소는 9개월의 유예 기간을 갖게 되며, 이를 통해 홍콩에는 옵트인 제도가 사라지고 허가를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만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일부 회사가 인허가를 받지 못할 것을 알고서도 신청서를 제출하여 유예기간 동안 부당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악용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 홍콩은 이번 발표를 통해 다시 한번 가상자산 허브로서 거듭나기를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급격히 강력해졌던 규제에 싱가포르 등 다른 지역으로 떠났던 기업들이 다시 돌아 올지는 미지수입니다.

CHA & KWON
차·권 법률사무소